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행정학 교수

요약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임.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함. 재정대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 경기부양정책의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할 경우 당해 연도의 GDP에 미치는 효과는 0.5% 내외에 불과한 데 이를 기초로 보면 필요한 재정대책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야 하며, 그 재원은 채권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조달하여야 함. 지출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계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함. 6개월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의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통화정책 방향이 다르면 효과가 반감될 것임. 사실 그 동안의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달리 지나치게 신중하게 움직였음.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함. 특히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국채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그나마 부족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므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함.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문제의 제기

-세계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 경제의 지표가 개선되었는데 향후의 이러한 행보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의 기로에 있음

*미국의 주택건설 지수, 실업률(7%대) 등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주가는 2013. 3 사상최고치(14,296)를 달성한 후 이를 연일 경신하였음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경제가 파국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임

*2013.1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Worst is over."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다보스 포럼 인터뷰 내용:

"지난 해 유로존을 뒤흔든 그리스 유로 탈퇴 우려, 스페인의 위기전면화 가능성 같은 잠재적 테일 리스크(tail risk)가 일단 줄었다."

-세계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 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팽창조치임

*재정적자를 감소해야만 하는 유럽에서도 당면한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2012년 긴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고, 미국도 재정절벽의 충격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통화 면에서는 미국에서 2년간의 제로금리 시행 및 매월 850억불의 통화를 방출하고 있고, 일본은 아베 수상 취임이후 중앙은행 총재를 팽창론자로 임명하면서 무제한 통화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2013년초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 주가 등 지표면에서나 심리적으로나 위축을 면치 못하고 있음

*2013.2 취업자 증가 20만명, 고용률 57.2%

*주가지수 2,000 미만

-최근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달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상당부분 필요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하고 이를 적시에 시행하지 못한 데 기인함.

*유럽 미국 등 재정구조가 취약한 나라에서도 팽창정책을 취하는 2012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한국은 균형재정의 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부여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해야 하는데. 새 정부의 복지를 위한 자원마련 과정에서 예산 절감 논의가 주제로 부각

*통화당국도 경제상황 및 세계적 추세와 흐름에 비추어 지나치게 신중하게 행보 (2011.6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 속에 2012.7 및 2012.10 단 두 차례 각각 0.25% 소폭 인하)

-특히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의 경제정책 타워 공백으로 거시경제 정책 추진 시기가 지연

2. 세계 경제와 주요국가 경제의 최근 동향

가. 세계

-IMF는 2013. 1. 23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글로벌 악재들이 점차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2013년 세계경제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정책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이러한 성장세를 보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

*다만 하방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경고 (Downside risks remain significant.)

-IMF의 2013.1 전망은 2012. 10 전망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지만 그 전 경기침체기에 전망 수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였던 전례에 비해서는 미미한 조정이며, 2013 성장률 전망치는 2012 성장률보다 높음

*2008.10부터 2009.1 사이는 전망 수치를 플러스 3%대에서 마이너스로 대폭 하향 조정

IMF 세계경제성장 전망 (2013.1 WEO update)

	2012	2013
세계	3.2	3.5
미국	2.3	2.0
유로	-0.4	-0.2
일본	2.0	1.2
NIE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1.8	3.2
중국	7.8	8.2
인도	4.5	5.9
브라질	1.0	3.5

IMF 세계경제 전망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속해 있는 신흥공업국 (Newly Industrialized Economy) 인데, IMF는 이들 그룹의 2013년 성장률 전망이 2012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가 나올 무렵인 2013.1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8%로 하향 조정하였고 그 이후의 지표도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상태라면 한국에서는 IMF가 전망하는 성장회복 추세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함.

나. 미국의 경제동향과 경제 정책

-미국의 2013.1 소매판매는 8.2% 산업생산은 2.4%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지수도 전년비 상승하고 있음.

* 다만 2012 4/4 분기는 재정절벽 압박 요인 등 일시적 요인으로 GDP -0.1% 상승

-실업률도 2012.9 이래 7% 대 유지

*실업률의 8% => 7% 대 진입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한 승리 요인의 하나로 지적됨

-미국의 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낙폭을 만회하는 정도를 넘어 종전의 사상 최고치를 2013. 3. 6 경신하고 그 이후에도 대체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



-미국의 재정정책 (재정절벽을 줄이기 위한 행정부와 의회의 노력)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와 미국의회가 재정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옴

2012.9 반년간 (2012.10-2013.3) 의 잠정예산 합의

2013.1 감세축소방안 합의

지출부문은 2013. 2. 28 까지 합의키로 함

미 합의회는 예산 자동삭감 (시퀘스터)

2013.2 합의된 시한에 미 합의회로 시퀘스터 발동 중

2013.3 잔여 반년간 (2013.4-2013.9) 잠정 예산 합의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와의 회동을 통해 재정절벽 해소를 모색

-미국의 통화정책

2012. 12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미국의 실업률이 6.5%에 달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 (실업률 추계를 함께 발표하였는데 2015년에 가서야 6.0-6.6%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시장에서는 제로 금리 정책을 2년간은 더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인식 (물론 물가가 2.5%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으나 현재의 물가상승률은 1.8% 수준)

2013. 3 월 850억불의 국채매입을 통한 통화방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

-미국에서도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정책 기조는 팽창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다. 유럽의 경제동향과 거시경제정책

-유로경제는 일부 심리지표가 개선되었으나 핵심국가들의 성장률이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

는 등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모습 (KDI 2013. 3 경제동향)

-최근 키프로스 사태 등 일부 국가들의 재정악화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경기 회복에 제약

-유로존 국가의 지표 (2012.12)

실업률 11.8%
산업생산 -2.4%
소매판매 -5.4%

-유로존 금리정책 : 0.75% 의 저금리를 2013.3 현재 8개월째 유지

-유럽의 재정정책

*유럽 위기 발생 초기인 2010년 그리스의 유럽연합 구제 금융신청 시 긴축 약속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약속의 실천 상황을 보아가며 합의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

*2012년 스페인, 이태리 등의 규모가 큰 나라로 위기가 확산되고 유럽의 정치 지형도 달라진 후 긴축 일변도에서 우선 필요한 경기 부양은 실시하는 조치로 선회 (2012. 6 유럽 정상회담에서 GDP의 1%에 해당하는 1,300억 유로의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

라. 일본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일본 경제는 지진 복구 사업으로 2012년 성장세를 보였으나 그 수요가 소진되어 감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

-2012 4/4 분기는 수출과 기업투자 부진으로 -0.4%(연율)의 경제성장

-2013. 1월에도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

-일본 경제주요지표 (2013. 1)

산업생산 -5.1%
소매판매 -1.1%
무역수지 1,850 십억엔 적자
물가 -0.3%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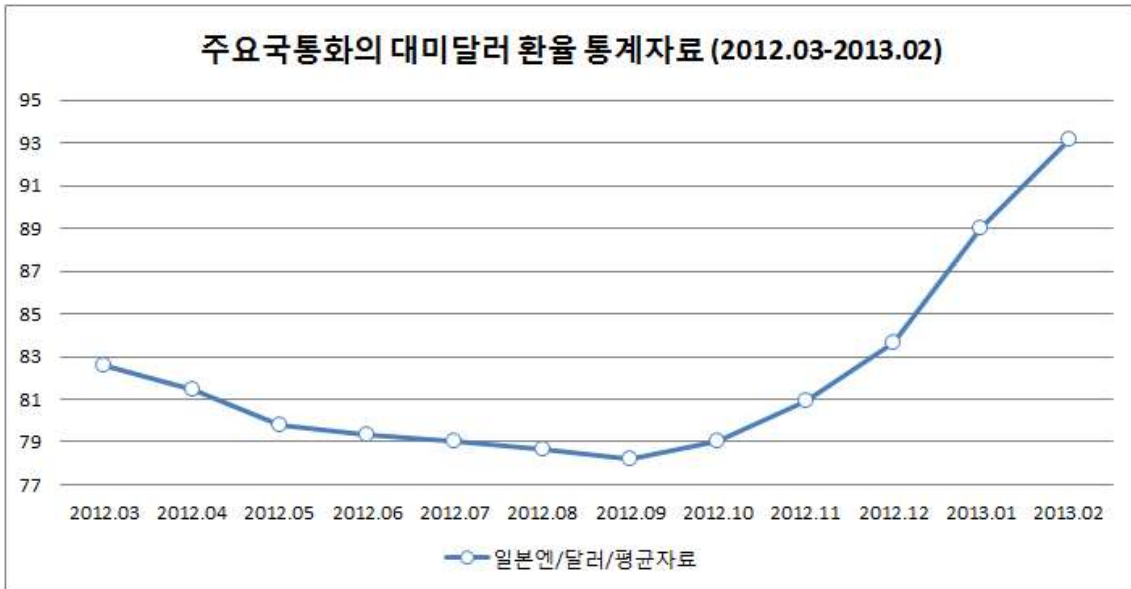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재정 확장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한 무제한의 통화팽창 정책 추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려할 정도의 일본은행에 대한 영향력 행사 (구로다 총재 임명)

-아베 수상의 통화팽창 정책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으나 폴 크루그먼, 벤 버냉키 등은 필요성을 인정

엔 달러 환율 추이



마. 중국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 중국경제는 2012 4/4 분기 경제성장률 7.9%를 기록하여 그 전까지의 7.4% 수준에서 반등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등 주요 내수지표들의 개선 추세도 유지)

-중국의 경제지표 (2012. 12)

- 공업생산 10.3%
- 소매판매 15.2%
- 물가 2.5%

-2013. 3 전인대의 중국의 경제정책 목표

- 성장률 7.5% (통상적으로 중국정부는 공식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는 만큼 실제는 8% 이상)
- 물가 3.5%

-재정정책은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내수확대에 비중

-통화정책은 인플레이 압력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3. 한국경제의 실적과 최근 동향

가. 최근 3년간의 경제성장률 전망: 상저하고

-한국은행의 2011년 경제전망 (2010. 12. 10)

*상반기 3.8%, 하반기 5.0% (평균 4.5%)

-한국은행의 2012년 경제전망 (2011. 12. 9)

*상반기 3.4%, 하반기 3.8% (평균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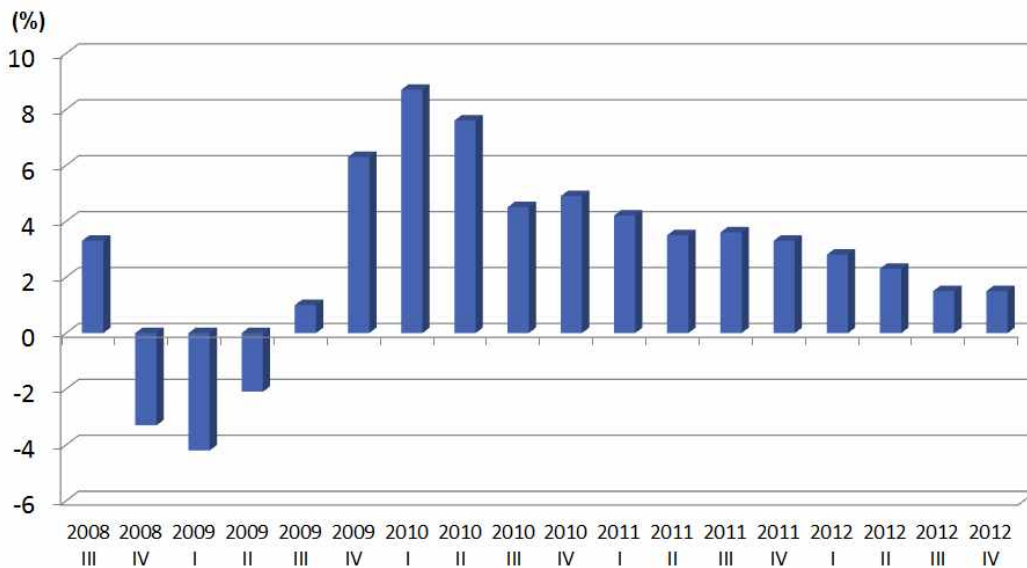
-한국은행의 2013년 경제전망 (2013. 1. 11)

*상반기 1.9%, 하반기 3.5% (평균 2.8%)

나. 2011-2012 경제성장률 실적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전망과 달리 상반기 하반기 모두 저조하며 연평균도 전망에 미달

한국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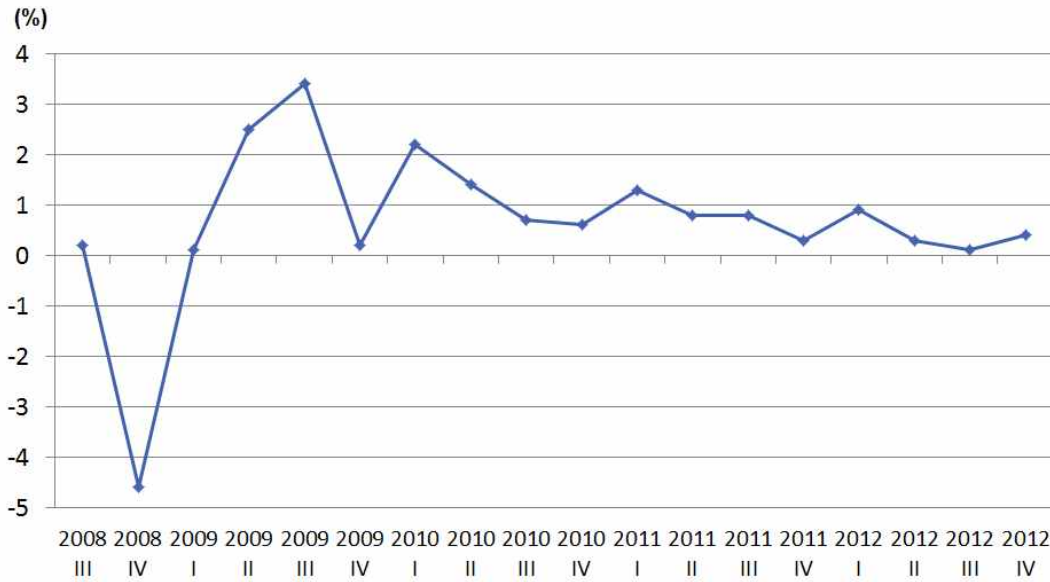


10.4/4	11.1/4	11.2/4	11.3/4	11.4/4	12.1/4	12.2/4	12.3/4	12.4/4
4.9	4.2	3.5	3.6	3.3	2.8	2.3	1.5	1.5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도 계속 낮아져 왔음

<참고> 한국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전분기 대비 수치를 연율로 환산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전년동기 대비 수치보다 현재의 경제상황 진단에 유용)

한국경제성장률 (전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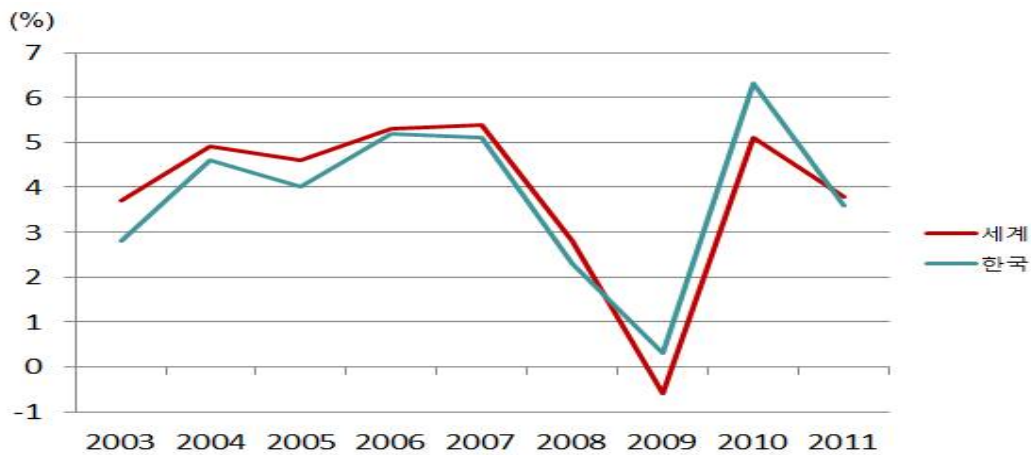


10.4/4	11.1/4	11.2/4	11.3/4	11.4/4	12.1/4	12.2/4	12.3/4	12.4/4
0.6	1.3	0.8	0.8	0.3	0.9	0.3	0.1	0.4

다. 한국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의 괴리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3-2011 년간 세계 평균성장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음

한국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



-그러나 2012년 실적은 세계평균 3.2% (IMF 추정), 한국 2.0%로 격차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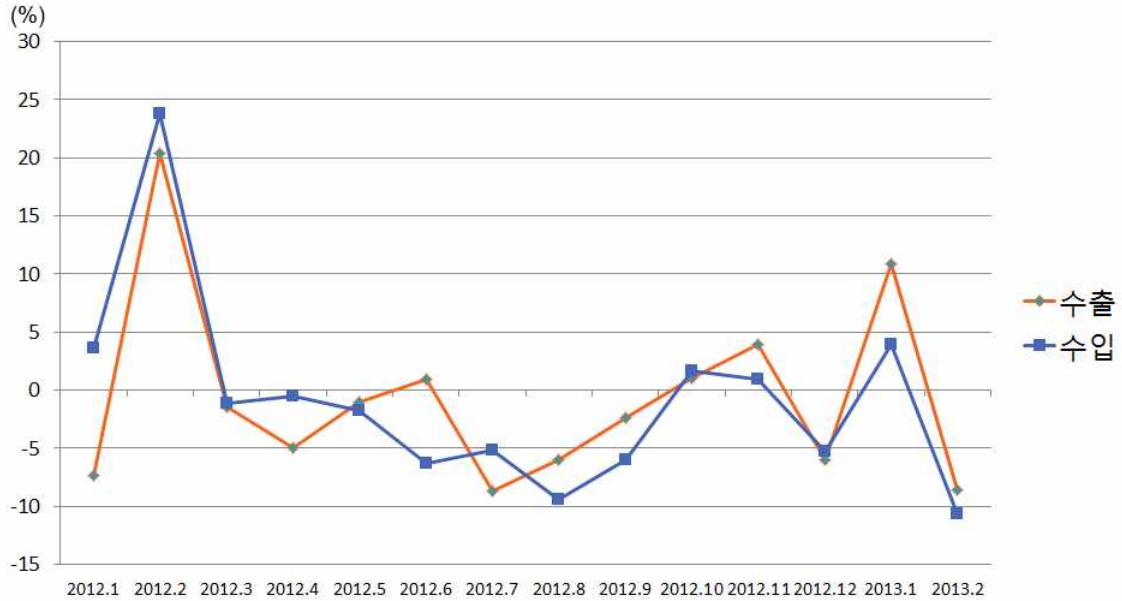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의 새 정부 수립 첫해인 2003년과 2008년에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돈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임

라. 최근 한국 수출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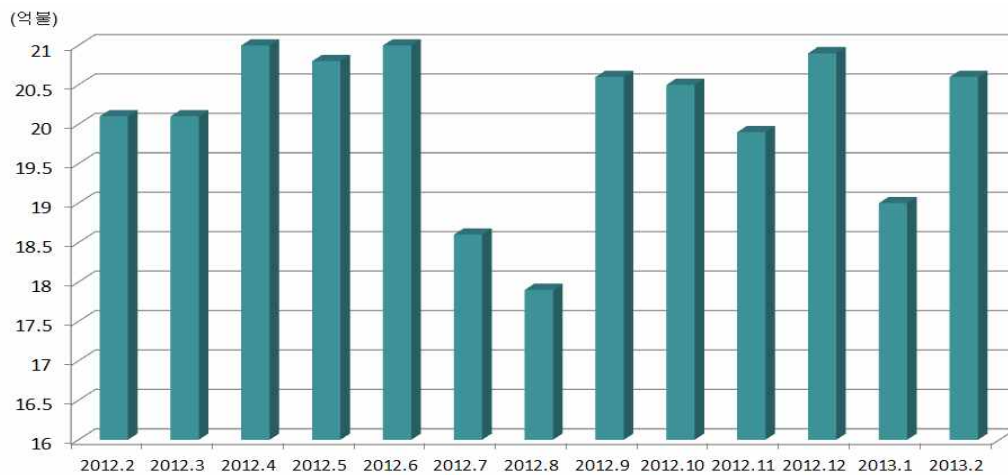
-2012년 부진을 면치 못하였던 수출은 2013.1 반등하였으나 2013.2 다시 감소

수출입 증가율 추이



-일별 평균 수출액도 뚜렷한 개선 징후를 발견하기는 힘들

일평균 수출실적



-지역별 수출은 ASEAN 중동 미국이 증가하였고 유럽은 감소, 중국은 그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앞으로의 수출은 최대시장인 대중국 수출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지역별 수출실적(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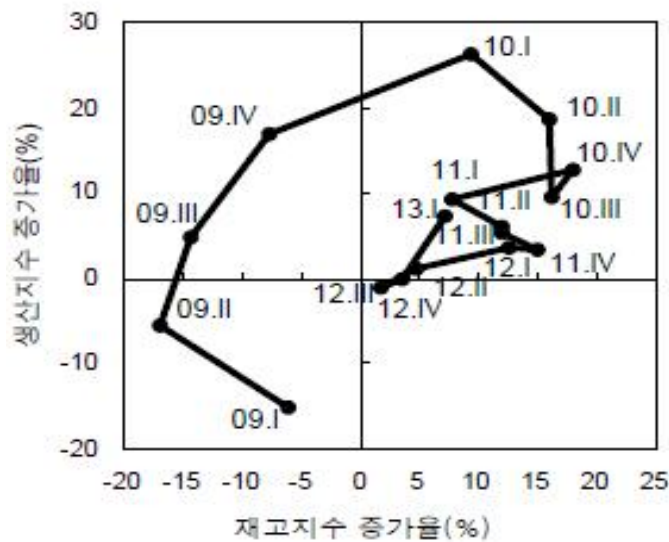
	금액(백만불)	증가율(%)	비중 (%)
전체	548,076	-1.3	100.0
EU	49,379	-11.4	9.0
중국	134,331	0.1	24.5
일본	38,850	-2.1	7.1
ASEAN	79,241	10.4	14.5
미국	58,524	4.1	10.7
중동	36,621	11.4	6.7
중남미	36,748	-8.4	6.7

마. 생산재고의 순환과정에서 본 경기국면

-생산 재고의 순환 과정에서 보면 경기침체에 있는 상태임은 틀림없으나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

-통상적인 경우에는 경기가 나빠서 재고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는 재고가 점점 축소되어 소진이 되면 생산이 확장하는 추세로 들어서는 시계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나 2011년 하반기는 재고지수가 다시 증가하여 회복기조에 들어서지 못하였음

생산재고순환



주: 2013년 1/4분기는 1월 수치임

4.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및 추진방안

가.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거시정책은 정부의 승계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쳐지고, 정책추진에 실기한 감이 있음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부양정책을 추진한 것과 대조적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 팽창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현실적으로 재정확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효과가 희석되지 않으려면 통화의 공급을 늘려야 함

*외국인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원화 환율의 상승 억제를 위해서도 확장적 통화정책 필요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 실시가 매우 중요**

*또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보다 즉각적인 팽창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지출을 집중해야 함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자의 반응이 긴요하며 **거시경제정책의 시그널링(signaling)을 뚜렷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필요**

*확장적 정책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기조라는 점: 재정 및 통화 정책 공통

**현 시점에서 증세와 같은 역 방향의 정책 논의 자제

나. 재정 대책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음

-다만 그 규모와 내용이 문제되는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당기간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며 이것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능력 자체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KDI (이재준, 2011) 4.3%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2013.2.26) 3.8%

BNP 파리바 (2013.3) 3.25%

-따라서 잠재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2012년 기준으로 할 때는 1.5%-2.0%, 2013년 전망을 기준으로 하면 0.6% - 1.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김성태(KDI 2012) 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한국은 3년에 걸쳐 총 59.8조원(지출 증

대 30.5조, 세수 감액 29.3조)의 부양정책을 실시하여 2.2%의 경제성장률 증대효과를 거두었음. 2009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8.4조원 (지출 증대 17.4조원 세수감소 10조원) 규모의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는데 1.9%의 성장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함

*10조원 확대에 0.63% 정도의 성장을 제고 효과가 있으며, 이는 종전의 연구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로 보이며, 이는 당해 연도뿐 아니라 시차에 따라 다음 해에 나타나는 효과도 누적 합산하였기 때문임

-위 연구를 근거로 할 때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정책 규모는 (효과가 당해 연도에 바로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음

잠재성장률을 3.25%로 보는 경우: 약 10조원

3.8%로 보는 경우 : 약 17조원

4.3%로 보는 경우 : 약 25조원

-현실적으로 2013년의 추경예산 편성이 2013.4 월에 이루어지더라도 성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전부 금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그 전해 하반기에 15조원 규모의 부양정책을 실시한 효과가 함께 나타남) 실제 소요 규모는 위 수치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규모는 15조원 이상이 되어야하며 지출확대와 세수감면을 병행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함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역할도 필수

-추경예산에 포함하여야 할 지출 대상 사업: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

영세 서민층을 기금 지원 (다만 추경의 성격상 항구적인 지출구조 확대를 수반하는 제도 도입은 원칙적으로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

타당성이 검증된 계속사업 등에 대한 지출 확대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

균형 재정의 목표를 위해서는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2년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여 충당할 재원이 없음 (유럽의 경우도 성장률 하락 - 세수 감소 - 적자 누적의 악 순환 경험)

따라서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며 또한 빠른 경기부양효과도 거둘 수 있음

*단 지방채 발행은 적극 억제해야 함 (2009년 부양정책 시 발행한 지방채 및 이를 통한 도시개발 사업 등이 부동산 문제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부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음)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계속 추진하되 추경 재원과 직접 연계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환 재원 등

을 위해 사용

-세입 측면의 대책

현실적으로 지출 확대만으로는 필요한 규모를 채우기 어려움. 또한 과거 한국의 경기부양정책이나 외국의 사례도 세수 측면을 포함하였음. 더욱이 세수는 지난 정부가 시행하였던 2012년의 소득세 간이 잠정징수액 인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잠정조치가 2013년 환원되어 경기 수축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있음

-따라서 세제측면의 부양대책을 포함하여야 경기확장효과를 거둘 수 있음

*취득세의 6개월 한시 감면을 1년으로 확대하는 정책 조기시행 필요

*세수증대를 위한 구조개선 논의가 금년의 경기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다. 통화정책 (기준금리의 인하)

-GDP 갭 및 기준 금리 추이 비교

	10.4/4	11.1/4	11.2/4	11.3/4	11.4/4	12.1/4	12.2/4	12.3/4	12.4/4	
잠재성장	3.8% - 4.3%									
성장률	4.9	4.2	3.5	3.6	3.3	2.8	2.3	1.5	1.5	
기준금리	3.0%		3.25%					3.0%		2.75%

*“국내경제가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 갭을 나타낼 것”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2013.3.14)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12 연간	2012 1/4	2012 2/4	2012 3/4	2012 4/4	2012. 2
상승률	2.2	3.0	2.4	1.6	1.7	1.4

-다른 나라의 기준 금리

미국 0-0.25% (2015까지 유지 방침) 월 850억불의 국채매입

유럽 0.75%

일본 0-0.1%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무제한 통화방출

호주 3.0% (2012. 12까지 17개월 동안 1.75% 인하)

-GDP 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다른 나라의 정책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참고> KDI 의 정책건의 (2012.11)

“통화정책은 현재의 경제여건 및 정책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여, 경기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

고 있어,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상황. 또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내외 금리차를 축소하여 급격한 자본 유입가능성도 완화.”

-통상 KDI 는 금통위위의 결정사항인 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왔으나 2012.11 에는 경기 침체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건의

-그러나 한국은행은 2012.10 금리수준을 현재까지 고수

-현 단계에서 소급하여 볼 때 한국은행이 2012 년중 또는 2013.3 까지 추가적으로 2-3 차례의 0.5% 내외의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됨.

-현 단계에서라도 재정의 추가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국내경제 상황과 거시경제정책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1-2차례에 걸쳐 **0.5% 정도의 기준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국제적으로 출구전략의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인하조치를 조기에 실시**하고, 상황 변동 시는 그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여야 함.